

이슈파워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상 '별도로 결정' 해석 쟁점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분할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이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씨는 이혼 확정 뒤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지씨가 56세로, 지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분할연금 지급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무원연금법 46조의4는 동법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다. 지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니 60세 이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해당 조항이 분할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그 비율을 달리해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할연금 지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지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지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2부제 상시화...점검단 1천명 사업장 단속

다가오는 겨울과 봄철 맑은 하늘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정부는 올해 12월1일~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우선,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 음달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정부는 올해 12월1일~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지침을 마련해 이달 대상기관에 배포했다.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관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해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발전 출

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다. 지난 15일 강원권 발족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이달부터 168명 인력,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졸업 앞둔 고3 전통성년례 2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전통성년례를 하고 있다. 이번 전통성년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성년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정시 40% 확대” 강남 부동산 폭등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종 개선·논술 폐지해야”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입수능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못박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시 확대 비율이 명시되면 수능 문제풀이에만 집중해 교실 수업이 황폐화되고, 사교육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교육특구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할거라는 지적이다.

대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과 논술 전형 폐지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6일 오후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발표되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겨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선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정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정시 비율이 40% 선으로 확대되는 안이 방안에 담길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이 정시 비율이 정해지면 학생들은 그만큼 수능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학교 교육도 암기와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돌아갈거라는 게 사교육걱정의 분석이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정해 권고하면 실제 정시 비율은 권고안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더해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권고한 비율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남이나 목동 등 수능 학원이 몰려있는 교육특구의 부동산가도 솟구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교육걱정은 대신 학종 제도 손질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상경력’, ‘자율 동아리’, ‘자기소개서’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요소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 3가지 요소는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 등이 큰바 부모찬스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필과 철삭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 자기소개서는 우선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사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논술 전형도 폐지하자고 말했다. 대신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높여 부모의 배경이나 지역적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네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 고객센터 1577-1000 |